

“서울內 지하철·다리 10년 후 노후화 ↑ ...인프라 관리 시급”

“유지관리 내용 포함해 생애주기로 관리 필요”

서울 시내에 30년이 넘는 다리와 지하철, 터널 등 노후화된 도시인프라가 10년 뒤엔 절반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노후인프라의 지진 재난안전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포럼’에 참석해 ‘서울시 도시인프라 노후화와 지진환경(시설물)’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국토교통부 자료에서는 노후시설물을 30년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현재 서울시도로 교량의 34%가 30년을 초과했다. 30년이 넘는 도로 터널은 31%를 파악했다. 지하철은 2018년을 기준으로 38%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로 교량의 경우 10년

이내에 30년을 초과하는 노후시설물이 60%로 증가했고 20년 이내에는 90%에 달했다. 터널의 경우 10년 이내에 49%, 20년 이내에는 96%가 노후시설물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하철 역시 10년 이내에 48%, 20년 이내에는 90% 이상이 노후화 된다.

이미 하수도관로의 경우 현재 30년이 넘는 노후시설이 50%로 나타났다.

이영환 연구위원은 노후인프라 관리와 관련해 “재로 건설되는 인프라 시설을 대상으로 관리를 일원화하고 유지관리 내용을 포함한 생애주기 관리 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 및 전문

가의 정밀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 경로당, 농어촌 교량, 응벽 등 소규모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 시행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상시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내진설계기준을 시설물별로 내진등급, 내진성능목표, 재현주기 등에 따라 적합한 내진성능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삼성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최근 내진설계기준에 국내지반의 특성을 적용한 설계기준이 개정 및 반영됐다”면서도 “그동안 기존 내진설계기준은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해외 기준을 적용했던 만큼 각 시설물별로 적합한 내진성능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외교자료 이상재 선생 유품 공개

한철호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월남 이상재 선생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자료’ 기증식 및 언론공개회에서 미국공사왕복수첩과 미국서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이상재 선생의 증손인 이상구씨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간직해오다 기증한 것으로 문헌자료 5점과 사진자료 3점이며 미국공사왕복수첩과 미국서간은 그간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자료이다.

내달까지 횡단보도신호 5초 연장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노인 통행 잦은 930여곳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오는 3월까지 보행 신호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상 장소는 최근 3년 동안(2016~2018년) 노인 보행자 사고 발생 지점과 노인복지관 주변 등 노인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930여 곳이다. 경찰청은 이곳 횡단보도의 보행속도 기준을 현재 어린이·노인보호 구역과 마찬가지로 1초당 1m에서 1초당 0.8m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m 길이의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신호가 5초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연장 조치는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 33곳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시범 운영에 따른 결과물이다.

모니터링 결과 경기 수원시 매탄 초등학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횡단을 못한 노인의 수가 61명에서 18명으로 7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번 연장 조치로 횡단보도에서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에서 노인 보행자들의 사고예방은 물론 안전 체감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승차거부’ 택시회사 22곳 첫 운행정지...60일간 730대

2개월간 4차례 나눠 시행 “지도·감독 책임 물을 것”

서울시가 14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내려진 조치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가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시는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 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돼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한다.

1차 시기인 2월에 5개사 186대, 2차(4월)에는 6개사 190대, 3차(6월)에는 5개사 180대, 4차(8월)에는 6개사 174대 택시에 사업정지 처분이 시행된다. 차고지 기준 권역별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가 각각 운행정지 대상이다.

이번 처분은 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던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3개월만에 시행하는 것이다. 이미 2015년 시행된 택시발달법으로 승차거부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치구에 처분권한이 있었던 지난 3년 여간은 민원 우려로 처분실적이 전무했다.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이상’인 회사들이다. 시는 위반지수 단계에 따

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처분도 가능하다. 위반지수는 택시회사 소속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와 해당 업체가 보유 한 면허대수를 비교해 산정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 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선 회사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254개 전체 업체의 위반지수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뉴스

‘우울감 해소’ 서울 저소득 홀몸노인에 반려식물 보급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 6000명 대상

서울시가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6000명에게 3월부터 반려식물을 보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보급 대상자 6000명은 서울시 전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인구수 대비 자치구별 인구 비율에 따라 사회복지부서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시는 4000명, 자치구는 2000명에게 지원한다.

반려식물 보급은 고령화 사회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도시농업적 해법을 도입한 사례다. 적은 비용과 수고로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정서적 안정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실제로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반려식물 보급사업 참여 어르신 3000명 중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92%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2017년에 시작된 ‘서울시 반려식물 보급사업’은 시 사업과 자치구 추진사업으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아이비, 멜라니고루나무, 백량근 등

총 3종의 식물 4000개 화분이 보급됐다.

원예치료사가 정기적으로 자치구 생활관리사와 동행 방문을 한다. 식물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유선으로 수시 관리를 진행한다.

송민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반려식물 보급 사업은 도시농업을 통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반려식물 보급 사업은 원예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원예치료사의 일자리 창출 등 일석다조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